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관한 소고*

- 팬데믹 이후 공공관리의 방향에 대한 논의 -

A Review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public management after the pandemic -

김 경 동(Kim, Kyung D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and attempts to discus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ublic management after the pandemic.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transformative characteristics that cause changes from individual lifestyles to economic and social life. This study examin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phenomenon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and seeks the dire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ublic management after the pandemi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argely in the dire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ublic management after the COVID-19 pandemic: 1) discussion and direction setting for anti-corruption, 2) change of consciousness and securing accepta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s, 3) Corona 19 fans It is suggested as the direction of anti-corruption and public management after the pandemic.

In detail,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discussion and direction setting for anti-corrup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after the COVID-19 pandemic. To this end, this study, (1) discuss the direction and system of anti-corruption, (2) link iss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system, (3) participation in anti-corruption and composition of governance, (4) corruption Discussion and re-establishment of ethical standards for prevention, and (5) discussion and response to decision distortion were proposed.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change of consciousness and securing acceptability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tim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effort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provides (1) discussion and direction setting for changing consciousness and securing social acceptability, (2) concrete organizational system and participatory structure, (3) discussion and search for a series of programs and policies, (4) proposed the concrete enforcement system and structure, (5)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6) inter-locking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Finally, this study raised the need to discuss anti-corruption and public management after the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부패학·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한 동계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협력교수, 행정학박사

COVID-19 pandemic and to establish a direction. This paper includes (1) discussion and direction for moral hazard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bureaucrac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discussion and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evels of government size and authority of government officials, (3) composition of government, business, expert group, 3rd sector-citizens' governance system, (4) designing and providing a serie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3rd sector and citizens, (5) discussing and designing direct and indirect monitoring system for citize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after the COVID-19 pandemic. Ultimately, this study is based on securing human dignity and respecting human rights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public management for anti-corrup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COVID-19 pandemic.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following studies, and the study was terminated.

Key words: 4th Industrial Revolution(4IR), COVID-19 Pandemic, Anti-Corruption, Human Dignity, Public Management

I. 서론

2021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4IR)과 코로나19 팬데믹(Corona-19 Pandemic)을 경험하고,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경제사회를 변화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ICT/ Mobile 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산출되는 부가가치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체계와 모든 것들의 변화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자율주행 혹은 운송체계, 로봇틱스, 3D 프린팅 등의 기술체계는 하나의 키워드로써, 기술발전과 사회변혁을 가시화시키고, 경제사회의 전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매일 우리의 컴퓨터, 휴대전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이처럼, ICT와 Mobile ICT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에 노출된 우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선택과 행위를 전개하고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하나로 연결된 이벤트와 현상을 연출하게 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파급력을 보여준다.

한편,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급속도로 전파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발휘하였다. 코로나19는 발현한지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국

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지역단위에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Corona-19 Pandemic)을 선포하고, 전세계는 감염병관리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진행에 충분한 검사능력을 확보하거나 감염병 관리체제를 구비할 수 없었다. 초고속으로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코로나19는 우리를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다. 단지 일상적인 질병관리체제로 표준화된 전세계의 보건당국과 체계는 붕괴직전까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관리, 방역, 자가격리, 확진자 등의 의학적인 용어가 사회적인 용어로 자리잡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악화일로로 진행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위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건물을 출입할 때, 각종 센서를 거치면서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으며 출입관련 기록이나 SNS인증은 필요 없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 화상회의나 교육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차원에서 활용된 인공지능과 ICT/Mobile정보통신기술은 빅데이터의 가공, 유포, 축적 등 핵심역량으로 활용되고, 지능정보화를 구현하여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온라인 거래, 경제, 교육, 사회활동 등의 확대와 무인점포의 활성화, 로봇틱스 산업의 성장, 무인체계의 확장 등과 같은 일련의 경제사회 현상을 연출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진행된 급격한 정부규모의 확장과 관료제의 권한강화, 인권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사회적 차원의 빈부격차와 경제문제, 백신접종에서 발생하는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변혁적 흐름으로 초래되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들은 도덕적 해이와 부패로 귀결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미하는 변혁과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경제사회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활양식과 경제사회의 전환은 인간의 합리성과 선택에 기인하고, 인간의 합리성과 선택은 사회체계와 윤리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의사결정의 변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체제와 경제사회를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축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부패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 연구는 팬데믹 이후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 공공관리에 대한 논의와 모색이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도덕적 해이와 부패현상 등에 기초하여 연구와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성찰하여 팬데믹 이후에 도덕적 해이와 부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팬데믹·부패에 대한 논의

1.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ICT/ Mobile 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산출물, 일련의 상호작용, 이벤트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김경동, 202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지능정보화(Intelligent-Informatization)로 통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지능정보화로 개념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능정보화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과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김경동, 2019).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지능(Hyper-Intelligence)·초연결(Hyper-Connectivity)·초융합(Hyper-Convergence) 등으로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Information society)를 지향하는 변혁적·전환기적인 특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ICT/ Mobile ICT를 통하여 딥러닝(Deep Learning)을 진행하고, 특정 대상이나 데이터의 학습으로 정보해석능력을 극대화한다(김경동, 2019).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보분석과 가공을 진행하고, 대량의 정보를 유포 및 확산시킨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딥러닝은 다음 세대의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기존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완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ICT/ Mobile 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연결하고,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연동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ICT/ Mobile IC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능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하고, 인프라와 제반기술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실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우리가 활용하는 드론과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3D 프린팅 기술, 주문형 경제, 맞춤형 생산체계,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핀테크, 자율/ 무인운송체계 등은 딥러닝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으로 구동되는 지능정보화에 기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기존의 기술과 인프라, 사람과 사물,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결합·융합을 포함하고,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2011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Hannover Fair)의 산업 4.0은 4차 산업혁명의 기원이 되고,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방향과 개념

화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키워드를 제공하였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경제사회의 전환과 같은 변혁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들의 편익과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적 편익과 경제적 효용을 향유하였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사회와 정치체제의 전환을 도출하고, 우리의 기본권과 인권을 개선시켜 왔다. 지난 1-3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시작하여 경제사회의 변혁을 초래하였고, 정치체제와 사람들의 의식체제를 전환시켰다. 산업혁명의 결과는 인류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고, 인간의 효용과 편리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기술적 편리성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누적된 공공문제들, 이를테면 빈부의 격차, 불평등의 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4차 산업혁명은 기대와 각광을 받고 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변혁적 특성에 기인한 문제들, 거대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빅브라더의 감시사회,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의 문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유발한다. 이 같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거대정부에 의한 통제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과정에서 진행된 대량의 정보유통과 통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추적, 인력과 물자의 통제 및 관리 등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가공할 기술적 역량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교차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해소 혹은 개선을 위해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래의 불안과 희망의 교차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이점(Singularity) 돌파로 초래되는 변혁과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4차 산업혁명 내지 지능정보화가 도래한 상황에서 기술혁명으로 발생하는 변혁과 전환, 하나의 현상과 산출물의 원천이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와 욕망에서 출발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와 욕망은 우리의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에서 산업혁명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현상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 애초에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유토피아적 미래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본질은 인간의 도덕과 부패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2. 코로나19 팬데믹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는 발생하고, 극단적인 속도로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초고속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는 발생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되었고, 국가에서 지역단위로, 지역단위에서 전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30일 선포한 에피데믹(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도 시기적으로 뒤늦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Corona-19 Pandemic)을 선언하고, 전 세계는 감염병관리체제로 돌입하게 된다.¹⁾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19의 전염속도는 극단적인 속도와 임팩트를 발휘하였다. 기하급수적인 확진자의 증가와 가중되는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전 세계의 보건체계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저널리스트들은 코로나로 인한 급진적인 위기에 직면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Before Coronavirus: BC)과 이후(After Coronavirus: AC)로 시대를 분리하여 언급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주요 분기점 내지 심각한 리스크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코로나19를 부르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며 예측과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에 의해 코로나19는 수많은 명칭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취급되거나 설명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관통하는 본질은 급진적인 변혁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명칭, 설명, 분석, 예측, 전망 등이 무엇이든 결과론적으로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초고속적인 속도만큼 진행된 개인과 국가사회의 변화는 우리를 당황시키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우리는 건물을 출입할 때 역시 각종센서와 온도측정을 하지 않았고, SNS를 통한 인증을 하거나 수기식 명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착용이 일상화되었고, 건물을 출입할 때 당연한 것처럼 각종 센서장치들을 통과하고 신체의 온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은 새로운 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인하여 대면-접촉의 생활양식은 비대면-비접촉의 온라인 위주의 생활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온라인 소통, 회의, 교육, 거래 등이 활성화되자 사회적 차원에서 온라인 거래와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가 재편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비접촉 사회를 구현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만 팬데믹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능정보화사회(Intelligent-

1) 주일일본대사관웹사이트, 일본경제 및 정책동향 섹션, [경제]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관련 언론 평가, 2020년 3월 23일.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65/down.do?brd_id=3166&seq=1344815&data_tp=A&file_seq=1(열람일자: 2021. 12. 19. 19:10)

Informatization)를 구축하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사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경제활동, 노동방식, 물류유통, 일상생활, 사회규범, 인식 등에 전환을 가져왔다. 가시적으로 무인점포의 확산, 저숙련 노동력의 대체, 로봇틱스산업의 부상 등은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새로운 노멀(New Normal)에 직면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위, 개인과 조직,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코로나 감염병 방지 혹은 감염병 관리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 헌법적 기본권 침해여부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길곤·김범, 2020).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진행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로 인하여 용인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관리는 기본권 침해여부로 확장되어 논쟁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K-방역이라는 타이틀로 보여주거식 전시행정의 행태는 정부당국의 감염병 관리와 방지를 놓고 비판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²⁾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변혁과 전환을 경험하게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임팩트 역시 강하게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쟁과 혐오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비대면-비접촉 문화의 확산처럼, 백신접종을 둘러싼 갈등과 새로운 유형의 혐오는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반목과 대립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다. 여기에 백신의 효과성이나 백신 접종이후 후유증의 여파는 백신접종에 기인한 사회문제를 양산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감염자에 대한 우려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자기보호 본능을 작동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규모의 확대와 공권력의 강화는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부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지출의 팽창은 경제위기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차원에서 공권력의 확대는 큰 정부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부불신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큰정부의 실패를 경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작은 정부의 만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체제의 유지 혹은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윤리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과거, 한국에서 1998년 IMF 구제금융체제의 경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확대되는 정부권력과 관료제의 권한강화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관료제가 주도한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고도화, 관습적인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 정부관료제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회상황 등은 정부규모의 확장과 정부관료제의 공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근거가

2) 동아일보, 하루 확진자 7000명대, 45일 만에 거리두기 부활... 참패한 'K방역', 2021년 12월 22일,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1221/110885403/1>(열람일시: 2021. 12. 19. 21:00)

된다.

현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규모를 확장시키고, 공권력의 확대에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은 정부규모의 팽창과 공권력 확대에 대한 경각심으로 귀결되고, 정부의 부패와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의 만연에 대한 경계심으로 표출된다.

3. 부패와 도덕적 해이

부패(Corruption)의 개념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부패는 행위와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부패는 인류가 집단·조직·사회를 구성하여 하나의 체계를 성립시킨 이래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패현상은 일상적이고, 때로는 조직과 사회의 쇠퇴기 혹은 전환기에 나타난다. 정치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주요분야는 부패에 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는 부패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과 좌절을 반복한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접근과 개념은 학문분야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 통일된 개념이 없다.

부패문제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역사적 특성에 의해 맥락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관점과 태도에 의해 부패사례에 대한 상이한 판단과 해석의 원인이 된다. 일례로, 특정한 지역에서 부패행위로 통용되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부패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연구는 제약을 받거나 제한된 내용으로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부패는 인간의 선택과 행위로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이 작동하고, 환경, 조건, 상황에 의해 발생하므로, 하나의 사례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인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적인 이익 혹은 효용의 추구를 위해 부정,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얻는 일탈 행위(Deviant Behavior)로 개념화되고 있다(김경동, 2021). 부패개념의 주요경향은 공직이나 관료부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일선상에서 J. Nye(1967)는 공직부패의 개념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부패를 금전적 이득과 지위증진의 사적인 추구 과정에서 공적인 임무를 일탈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Nye는 사적인 목적으로 특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개념화를 시도한다. 그가 제시한 부패의 개념화는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직부패는 관료부패에서 정부부패로 확장되고 개념화가 가능하다. 정부관료제의 부패는 관료가 점유한 공직의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위증진과 영향력 향상 같은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을 저해하거나 일탈하는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해동(1974)과 한국행정연구원(1999)은 공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부패의 개념화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직부패를 공직자가 사익추구를 위해 공직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로 공직과 직무에 포함된 공익추구의 의무위반과 일탈행위를 설

명하면서 공직자의 의무위반을 부각시키고 있다. 2006년 국내에서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 공익, 시장 등 영역별로 부패의 개념 및 유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시한 부패 개념은 불법적인 행위와 범죄에 대비하면, 광범위하고 함축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한편, 법률적인 부패개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4호에 가, 나, 다목에 규정되어 유형별로 개념화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일탈행위로 정리된다.³⁾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목은 부패를 공직자의 직무관련 내용으로 지위의 권한남용과 법령위반 사항을 명시한다. 나목에서 부패행위는 공공기관의 예산, 재산, 계약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로 규정된다. 다목은 가목과 나목에 명시된 부패행위와 이를 은폐하거나 유인하려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패는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다. 본질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효용추구를 위해 선택과 행위를 전개한다. 합리적 인간에 의해 운용되는 시장과 정부는 효용추구를 위한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정부의 방임아래 시장의 행위자와 정부의 관료제에 의해 유발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가 관통하고 있다. 작은 정부에서 제약 없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효용추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고, 큰 정부에서 강화된 관료제의 부패는 정경유착으로 정부실패로 귀결된다. 1998년, 한국에서 IMF구제금융체제의 적용은 우리에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공공관리와 정책분야는 정부가 독점하여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과 같은 부패행위, 한국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IMF구제금융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세계금융위기(Global Finance Crisis)는 우리에게 정부와 시장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병 관리와 방역활동은 우리에게 확대되는 정부규모와 강화되는 공권력에 대한 우려를 품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큰 정부와 권한이 강한 관료제는 정경유착이나 정부포획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우려로 연결된다. 강한 수준의 정부규제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정책집행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대한 시스템은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3) 법제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D%8C%A8%EB%B0%A9%EC%A7%80%EB%B0%8F%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C%99%80%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열람일시: 2021. 12. 22. 19:18)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문제

1.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의 문제

2011년 독일 하노버의 “산업 4.0”과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의 이해”는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된다. 2011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산업 4.0은 독일 인공지능연구(DFKI)가 독일의 제조업 분야의 성장동력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당시 독일은 BRICS로 명명되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화인민공화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등 주요 신흥국의 부상으로 산업부문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은 자신들의 강점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Networked Factory를 구현하는 Smart Factory로 새로운 플랫폼 산업을 준비하였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의 이해는 산업4.0을 진일보시키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산업혁명의 파급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문제해결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로 출발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인 기대가 교차한다. 1-3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을 통하여 경제사회를 변화시키고, 체제전환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혁명은 자본가와 시장을 생성하고, 재산권을 바탕으로 계몽주의와 결합하여 절대왕권과 봉건주의를 붕괴시킨다.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한 하나의 기술적 진보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출범하게 하고, 인간의 기본권 개념을 생성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개선시키는 변혁적 흐름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누적된 공공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빈부의 격차, 빈곤문제, 인종차별, 인권문제, 마약류와 약물오남용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의 문제들을 이번만큼은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오히려 국가감시체제를 출현시키며 큰 정부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통제되는 전제적이고 압제적인 체제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공공문제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이슈와 문제들로 공공영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현재까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산출되는 경제적 효용과 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기술적 차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일본·EU·한국의 대응은 국가적 현실,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은 정부주도로 전략적·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김경동, 2021; 김경동, 2019).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윤리·규범차원의 접근은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사이버 보안과 윤리의 문제, 빅데이터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정보유통과정에서 공급자와 사용자간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김경동, 2021). 물론,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전자통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칙(이하 e-프라이버시 규칙)”,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 라인”, 「인공지능규제법안」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적 특성이 강한 법률과 독트린은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파급력을 상쇄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에 대한 응징과 규제에 한정되어 있다. EU의 규제법안들과 독트린은 엄격한 법과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제하는 내용과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EU의 법안이 주요 선진국과 한국에 보편성과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윤리와 도덕규범은 법과 제도의 보편성과 적용 가능성에 괴리를 발생하게 만든다. 다만, EU의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합리성에 기인하고, 인간의 욕망을 구체화한다. 인간의 합리성은 주관적인 자신의 효용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시작된다. 분명히 인간은 1-3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으로 산출되는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리성을 향유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4차 산업혁명과 그 지향점은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으로 경제적 편익과 기술적 편리성을 향유하는 고도화된 물질문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4차 산업혁명에 반영되어 효율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지적, 정신적, 물리적 노동력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기술과 기계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의 경향은 인공지능과 로봇틱스가 인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압도하고,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한 진전을 보여주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틱스, 자율주행/ 운송체계, 나노기술, 바이오산업 등의 미래지향적인 용어는 현실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는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 인공지능과 로봇틱스의 노동력 대체, 대량실업의 사태 등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문제를 표출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여부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에 기인한 개인적 차원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차원의 경제사회, 정치체제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윤리규범을 설정하지 못하여 각종 공공문제를 양산해왔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직면한 문제들은 새로

은 체제에 구시대의 윤리규범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소위 빈부의 격차, 약물의 오남용, 인종차별, 인권문제, 범죄문제 등 다양하고 고전적인 내용의 공공문제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서 함께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체제가 확립되었지만 새로운 윤리규범에 대한 고려와 논의의 부재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들이 총합을 이루면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귀결되었다. 또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우리에게 시장과 정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차 산업혁명으로 통용되는 ICT정보화 혁명에 기인하는 ICT정보통신 윤리문제와 각종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 등은 새시대에 적절한 윤리규범의 부재가 보여주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을 급속하게 진전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상과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윤리규범의 부재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로 인해 공공문제의 근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은 (1)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문제,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성 문제, (3) 적절한 윤리규범의 부재, (4)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의 문제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급력과 뉴노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19는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에피데믹(Epidemic)을 선언한다. 동년 3월, 전세계에 급격하게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Corona-19 Pandemic)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서, 세계각국은 감염병 관리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매우 극단적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임팩트를 발휘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의료보건체제를 붕괴직전까지 몰아부쳤고, 초고속의 전염력으로 우리를 공포와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코로나는 의료보건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을 필두로 모든 분야를 패닉상태에 빠뜨리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제사회에 변화와 전환을 초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였고, 대면-접촉의 오프라인 생활에서 비대면-비접촉의 온라인 생활로 전환하였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알콜로 손소독을 한다. 건물출입을 위해서 각종 센서장치와 열감지기로 신체온도를 측정하고, SNS나 전화를 통한 인증을 하거나 수기작성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생활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의 생활양식으로 전환되었다.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한다. 학생들 역시 온라인 교

육위주로 강의를 수강하고 교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비접촉에 기인한 인공지능과 ICT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은 무인점포, 무인운송과 물류체계 등의 확산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등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지능정보화사회로 전환을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는 온라인 소통, 거래, 경제, 교육, 사회 등으로 확장되고, 오프라인 경제에서 온라인 경제로 경제사회를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진적인 위기와 변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이전과 발생이후로 시대구분이 가능할 정도까지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와 저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변곡점이나 분기점으로 정의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다양한 명칭과 의미로 설명과 예측을 시도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관통하는 본질은 급진적 변혁이다. 팬데믹은 우리를 당황시키고, 우리의 공공영역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연쇄적인 변화와 전환을 강요하였다. 감염병의 초고속 확산과 대응체계와 관리지침의 급속한 수립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의 생활양식을 가져오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의 생활양식 변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경제사회의 전환을 가져오는 연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노멀(New Normal)로 기존의 코드와 생활양식, 경제사회의 대변혁을 초래하였다. 특히, 감염병 관리체계와 온라인 경제사회의 전환에 기인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이루어진 괄목할만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감염병 관리체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핵심적으로 활용하여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자 등을 관리하였다.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or Tracking)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을 구현한다. 이동 통신기술에 기반한 휴대전화 이용자의 Geo-Data와 GPS좌표를 활용하거나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접촉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확진자와 접촉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하게 해준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관리의 통제체계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주요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규모의 확장과 정부관료제의 권한강화에 대한 당위성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과정은 확진 혹은 접촉자 추적으로부터 격리 및 방역관리까지 개인정보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관료제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초래되는 낙인효과는 정부의 감염병관리체계와 방역활동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가명 정보처리된

데이터라 해도 공익 목적의 활용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개인이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인격권의 특성이 있는 기본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엄주희, 2020). 따라서,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정조치들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자유권 제한 문제로 연결되고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로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기인한 정부규모의 확장과 정부관료제의 공권력강화는 감염병예방과 관리에서 당위성을 제공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상태는 정부관료에게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규모의 확장, 정부지출의 확대, 공권력 강화 등과 같은 정부조직이 팽창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큰정부와 정부관료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귀결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경험하고, 정부와 시장, 관료제의 효용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정부규모와 관료제의 권한 확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우리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1998년 IMF구제금융체제의 경험을 반추해본다면, 정부규모의 확장과 관료권한의 확대가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만연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IMF구제금융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정경유착과 공직부패,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은 초기에 마스크 착용여부를 두고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였다. 감염병관리차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 격리자 등은 낙인효과와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으로 코로나19 방역차원의 문제에서 사회적 차별의 논란으로 확장되었다. 코로나19의 감염여부와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자기보호 심리로 인하여 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둘러싼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이를 정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급력은 (1) 생활양식과 경제사회의 변화, (2) 윤리규범과 의사결정의 전환,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4) 정보규모의 확장과 관료제의 권한강화, (5) 기본권과 인권문제, (6) 사회적 차별문제 등으로 제시된다.

3. 시대변혁과 부패문제의 본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 캠페인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생활양식과 경제사회를 전환하게 하였다. 또한, 감염병관리와 예방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1) 사회변혁적 특성, 2) 정부주도의 특성, 3)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내포한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변혁과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변혁적 개념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변혁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는 정부가 주도하여 관리하고, 집행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필연적으로, 정부주도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큰 정부의 문제와 관료부패의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으며, 인간의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리성의 추구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1) 확산속도, 2) 시간적 지속성, 3) 영향력의 범위, 4) 심리적 불안감과 안전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 12월 후반에 시작되어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으로 극단적인 속도를 보여주지만,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부터 가시화되어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비접촉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의 지속성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병에 대한 백신의 효과 혹은 치료제의 양산에 영향을 받지만 4차 산업혁명은 팬데믹 이후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은 4차 산업혁명을 압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로 작동할 정도이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속적인 변이를 발생시키고 백신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시적으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의 분명한 현상이지만 가시적인 위협을 보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에 비해 영향력이나 심리적 불안감과 안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에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변혁적 특성 경제사회의 변혁이나 체제의 전환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리성을 향유하기 위하여 개인, 조직, 사회, 국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의 특성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효용성과 편리성 위주로 접근할 뿐이다. 물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이슈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빅데이터 혹은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다양한 변화와 일대변혁이 발생하였다. 증기기관으로 인한 대량생산체제가 시작되면서 자본가가 등장하고, 재산권이 형성되었다. 산업혁명의 여파는 기술적 진전과 경제적 발전에 한정되지 않고, 계몽주의와 결합하여 절대왕정과 봉건주의를 붕괴시키며 정치체제의 전환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혁명은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개념을 형성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 체제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과 윤리규범체계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각종 법률과 철학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윤리규범의 창출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빈부의 격차, 인권문제, 인종차별, 범죄문제, 종교문제 등 다양한 공공문제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2-3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

롭혀 왔다. 특히, 우리가 경험한 시장과 정부의 실패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가 관통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시대변혁에 적절한 윤리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정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땀질하듯이 수정하고 고침으로써 우리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우리는 누적된 공공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대변혁의 특성을 가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윤리규범과 사고방식은 분명히 격차를 보인다. 단적으로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마스크 미착용자를 비판하지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마스크 미착용자를 비난하거나 제재한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생활양식 변화에서 경제사회의 변혁, 정치체제의 전환까지 포함하는 변혁적 흐름은 한 시대의 개인과 사회의 의사결정과 행위규범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단위에서 한 가정의 규칙과 규범을 습득하고 점차적으로 한 집단 혹은 사회의 윤리규범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가 습득한 윤리규범은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척도를 제공한다. 우리의 합리성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효용을 추구하기 위해 작동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합리성은 윤리규범과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윤리규범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윤리규범이 부재한 시대전환이나 변혁은 많은 부조리와 일탈행위를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만연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정부 실패 혹은 시장실패를 넘어서 시대와 체제의 붕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IV.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관리의 방향

1.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문제점은 인공지능과 로봇틱스에 비해 인간의 지적, 정신적, 물리적 노동력이 비효율적으로 판정받으며, 인공지능과 로봇틱스에 의해 인간이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한 상황은 대량의 실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기계가 보조를 이루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은 더 이상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효용과 편익의 극대화를 약속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인간의 노동력 나아가 인간의 능력자체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상황을 예고한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딥러닝은 Google 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대국, Google Deep Dream의 예술작품경매, 미국대학교 교육현장에서 조교활동, 일본에서 인공지능의 문학상 입상 등으로 인간의 지적, 정신적, 물리적 능력을 압도하는 현실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딥러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공장, 3D 프린팅 기술, 맞춤형 주문형 생산 및 경제체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드론, 무인/ 자율운송체계(자율주행자동차, 보트, 열차, 항공기 등)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로서 현재 적용 및 활용되는 기술들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선택과 행위 그리고 상호작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결정하는 윤리규범과 의식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의 고도화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칠 것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추적, 분석, 가공, 유포, 확산 등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과 금융은 이미 인공지능을 통한 매수와 매매, 나아가 전략적인 운용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제시하는 도로주행을 진행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 및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의 경험과 행동 그리고 생활양식과 사회변화는 하나의 변혁적 흐름에 기인한 통제가능성을 현실화하였다. 이를 테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마스크 착용이나 건물출입은 우리의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행동규범, 나아가 윤리규범과 사회적 코드의 변화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윤리규범과 의사결정 체계가 특정한 의도에 의해 조작되거나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규모의 확장과 정부관료의 권한강화가 진행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변혁적 특성은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차원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서, 정부주도로 국가차원의 대응이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 EU와 일본처럼 지방분권의 경향이 강한 국가 역시 예외없이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추진되고 한국정부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K-방역의 실패와 허상을 경험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와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초래되는 인권 문제와 확진자와 접촉자, 현장에서 의료진과 스태프들의 처우문제, 백신접종을 둘러싼 국민의 기본권 저해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준화(2018)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의 발표와 입법활동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과거 3차 산업혁명(ICT정보화혁명)은 정부주도로 진행되었고, ICT정보통신기술의 산업인프라와 인터넷망의 구축에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3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윤리규범과 의식전환이 진행되지

않아 사이버 윤리와 범죄문제가 양산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IMF구제금융을 경험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목격하였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혹은 관료제의 실패로 불리는 다양한 공공문제해결의 실패는 정부부패와 국가사회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다.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큰정부와 비대한 정책집행체계, 시장중심주의에 기초한 작은 정부의 방임, 정부관료제의 훈련된 무능과 공직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 기업과 시민의 배금주의와 윤리의 실종 등은 팬데믹 이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세부적으로, (1) 부패방지의 방향성과 체계에 대한 논의, (2) 4차 산업혁명의 이슈와 부패방지체계의 연동, (3) 부패방지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구성, (4)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와 재설정, (5) 의사결정 왜곡에 대한 논의와 대응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제도화 등을 제시한다.

2. 시대변혁에 대응하는 의식전환과 수용성 확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근원은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한다. 인간의 선택과 행위는 시대와 문명을 만들었고, 인간의 합리성은 주관적인 효용과 만족을 위해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윤리규범, 법,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범위밖에 위치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은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고,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합리성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과거의 산업혁명은 모두 인간의 합리성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리성에 대한 추구는 모든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문명의 역동성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ICT/ Mobile 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 및 융합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원, 사람과 인프라 등의 연결을 통하여 기술적 편리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결합 및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부가가치를 확장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효율성과 효과성의 사회로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는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윤리도덕과 의식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시대변혁과 시대유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체계와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겨울이 되면 두터운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옷차림을 하는 것과 같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변화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을 공유한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변혁적 흐름은 변명을 선물하거

나 파괴를 선사하였다. 이에 따라서, 시대변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기대와 우려를 중심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관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세상과 4차 산업혁명의 지속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초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설정된 새로운 노멀(New Normal)은 우리에게 희망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틱스, 대량실업의 문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비효율 판정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환원된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더 이상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기계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를 현실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체제의 전환이 인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의식전환이나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상황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다. 과거 우리는 전제적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정치체제와 사회로부터 기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받지 못하였다.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미지의 미래에서 초래되는 우려와 불안은 법과 제도, 윤리규범과 도덕체계를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 한정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감염병관리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과 예방이라는 당위성과 공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일련의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시대변혁에 대응하는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1) 의식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및 방향성 설정, (2) 조직체제와 참여구조의 구체화, (3) 일련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모색, (4) 집행체제와 구조의 구체화, (5) 제도화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6) 부패방지와 인권의 연동 등으로 제안한다.

3.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의 방향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에서 국가까지 생활양식의 변화와 경제사회의 변혁, 정치체제의 전환을 가져올 변혁적 특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도래는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4차 산업

혁명과 팬데믹 상황은 정부주도로 국가차원에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불가피하게 국가차원의 대응이 전개되고 있지만, 서구 선진국들과 다르게 NGO나 NPO의 활동은 결핍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모든 챕터에서 큰 정부와 관료제권한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K-방역의 감염병관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와 접촉자, 감염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상황을 지적하고, 기본권과 인권의 훼손 우려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외국의 미디어와 저널 그리고 각종 서적은 중국과 한국의 방역 체계의 효과성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행정부의 독주와 정부관료제의 일탈은 수면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특정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문제제기와 논란이 유발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목격하고, 국내에서 IMF구제금융체제를 경험하였다.

여기에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실패와 관료실패로 진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학의 각종 수학적 설명이나 정책학의 분석보다는 정경유착이라는 오래된 관행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만연이 문제해결을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공공관리의 방향은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규모와 정부관료의 공권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앙집권의 경향이 강한 나라이다. G. Handerson(1968)은 소용돌이 이론(Vortex Theory)을 통하여 왜? 한국정치는 소용돌이를 경험해야 했는가?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째, 고도의 중앙집권화와 지방권력의 부재, 둘째, 실질보다 형식을 중시, 셋째, 리더십보다 권위를 선호 등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다. Handerson의 논의는 조선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건국초기의 시대적 상황을 관통하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관료가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공권력은 조선의 멸망을 초래하였고, 3.15부정선거와 정권교체시 권력에 줄서기 등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1998년의 IMF구제금융체제는 정경유착에 기인한 정치부패와 관료부패 그리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큰 진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권의 위의 보고서나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을 하나의 지표와 각종 그래프로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황은 LH사태와 대장동 의혹을 필두로 각종 부동산관련 비리와 금융비리 등으로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을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정부와 정부관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정책결정과 집행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제3섹터가 아니다. 시민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성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NGO와 NPO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지원하는 형태이다. 한국에서 NGO와 NPO는 아스팔트에서 집합행동에 특화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창도(Policy Advocacy)의 역량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제3섹터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학교수 혹은 정책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아 정책역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의 대응방향은 거버넌스를 통하여 특정한 부문이나 집단이 헤게모니를 독점하는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고 이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공공문제를 중앙정부와 정부관료제가 독점적으로 담당하거나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정부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미디어 매체의 칼럼과 저널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접근과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조직과 관료제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적정수준의 정부규모와 정부관료의 권한에 대한 논의 및 설정, (3) 정부-기업-제3섹터-시민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성, (4) 제3섹터와 시민 등에 대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5)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감시체계에 대한 논의와 설계 등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고찰하고,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와 모색을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경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변혁적 특성을 가진다.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구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저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급진적인 위기에 직면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Before Coronavirus: BC)과 이후(After Coronavirus: AC)로 시대를 분리하여 언급할 정도로 충격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을 하나의 코드로 정착시켰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 회의, 미팅, 거래 등이 활성화되었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사회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위주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 관리와 방역활동에 4차 산업혁명의 주

요 기술이 핵심역량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트리거로 작동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규범, 의사결정, 사고방식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착용하지 않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자 코드로 작동하였다. 현재, 마스크 착용의 문제는 백신접종의 문제로 연장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 관리와 방역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우리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기본권 침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애초에 팬데믹 상황은 정부의 규모와 기능확장으로 연결되고, 정부관료제의 권한강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진행된 K-방역은 감염자와 확진자, 확진의심자,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침해를 정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신패스의 이슈와 9시 이후의 영업제한, 각종제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하게 하였다. 이 같은 상황들은 해외의 저명한 언론매체와 저널로부터 비판을 초래하였고, 국내의 언론매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논란과 비판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규모와 기능의 확장, 적극행정의 강조를 통한 공무원의 권한강화 등 거대정부의 등장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정부규모의 확장과 정부관료제의 권한강화로 초래되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정부실패, 시장을 방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목격하였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1998년 IMF구제금융체제를 통하여 정경유착의 폐해, 도덕적 해이와 정부부패를 통한 정부와 시장의 동시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대정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부패와 부패현상을 성찰하고,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으로 크게 1)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시대변혁에 따른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의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세부적으로, (1) 부패방지의 방향성과 체계에 대한 논의, (2) 4차 산업혁명의 이슈와 부패방지체계의 연동, (3) 부패방지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구성, (4)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와 재설정, (5) 의사결정왜곡에 대한 논의와 대응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시대변혁에 대응하는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1) 의식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및 방향성 설정, (2) 조직체계와 참여구조의 구체화, (3) 일련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모색, (4) 집행체계와 구조의 구체화, (5) 제도화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6) 부패방지와 인권의 연동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

리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을 주장한다. 그 내용은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조직과 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적정수준의 정부규모와 정부관료의 권한에 대한 논의 및 설정, (3) 정부-기업-제3섹터-시민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성, (4) 제3섹터와 시민 등에 대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5)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감시체계에 대한 논의와 설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자 논지를 전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타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가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라면서 연구를 끝마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논문

- 고길곤·김범(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8권 제4호. 1-19.
- 김경동(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윤리규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326-351.
- 김경동(2021).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과 윤리규범 성찰.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57-80.
- 김경동(2021).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알고리즘 규제연구: 국가행정과 지방자치의 위한 지능정보화의 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2호. 23-48.
- 김해동(1974). 관료부패의 제조건. 『행정논총』, 제21권 제1호. 123-136.
- 엄주희(2020).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법과 정책』, 제26권 제3호. 51-73.

2) 단행본

- 한국행정연구원(1999).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국무조정실.
- 정준화(2018).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Vol. 제16호, 국회입법조사처.

3)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

- 주일일본대사관웹사이트, 일본경제 및 정책동향 섹션, [경제]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관련 언론 평가, 2020년 3월 23일.
-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65/down.do?brd_id=3166&seq=1344815&data_tp=A&file_seq=1(열람일시: 2021. 12. 19. 19:10)

- 동아일보, 하루 확진자 7000명대, 45일 만에 거리두기 부활... 참패한 'K방역', 2021년 12월 22일,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1221/110885403/1>(열람일시: 2021. 12. 19. 21:00)

- 법제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D%8C%A8%EB%B0%A9%EC%A7%80%EB%B0%8F%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C%99%80%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열람일시: 2021. 12. 22. 19:18)

2. 해외문헌

1) 논문

Nye, Joseph S.(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2), pp. 417-27.

2) 단행본

Henderson, G.(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투고일자 : 2022. 02. 22

수정일자 : 2022. 03. 15

게재일자 : 2022. 03. 31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관한 소고 - 팬데믹 이후 공공관리의 방향에 대한 논의 -

김 경 동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고찰하고,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와 모색을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경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발생시키는 변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부패와 부패현상을 성찰하고,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으로 크게 1)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시대변혁에 따른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의 방향 등으로 제시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1) 부패방지의 방향성과 체계에 대한 논의, (2) 4차 산업혁명의 이슈와 부패방지체계의 연동, (3) 부패방지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구성, (4)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와 재설정, (5) 의사결정왜곡에 대한 논의와 대응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시대변혁에 대응하는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1) 의식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및 방향성 설정, (2) 조직체계와 참여구조의 구체화, (3) 일련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모색, (4) 집행체계와 구조의 구체화, (5) 제도화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6) 부패방지와 인권의 연동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1)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조직과 관료제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적정수준의 정부규모와 정부관료의 권한에 대한 논의 및 설정, (3) 정부-기업-전문가집단-제3섹터-시민 등 거버넌스 체계 구성, (4) 제3섹터와 시민 등에 대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5)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감시체계에 대한 논의와 설계 등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논지를 전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타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가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라며, 연구를 종결하였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부패방지, 인간의 존엄성, 공공관리

